

도서관정책과 도서관문화의 발전

국가적 차원의 도서관 육성 노력 절실

李景求

국사편찬위원회 사서관

한국도서관협회(회장 李春熙)는 '변천하는 사회와 도서관문화의 재조명'이라는 주제 아래 제28회 전국도서관대회를 지난 11월 15일부터 17일까지 전남대학교 대강당에서 개최했다. 21세기 정보화 시대에 대처하는 도서관계의 자세 등에 관한 열띤 토의가 진행된 이 대회에서의 기조연설(변천하는 사회와 도서관문화의 재조명 : 이두영교수)과 주제발표(도서관정책 이대로 좋은가 : 이경구씨)의 요지를 다음에 정리한다.

도서관이 현대사회에 있어서 중요한 사회적 도구라는 사실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현대사회가 갖고 있는 사회적 기능의 다변화, 문화의 광역화, 시간적·공간적 개념의 변화, 과학의 발달 등과 같은 특징은 필연적으로 지식수명의 단명화와 연구적 기능의 강화현상을 가져오게 되었고, 이로 말미암아 새로운 정보의 탐색기능을 발휘하기 위한 전인교육은 시대적 요청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한 점에서 세계의 모든 나라들이 정규 교육인 학교교육 이상으로 비정규적인 사회교육에 힘을 쏟고 있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귀결일 것이다.

도서관발전을 가로막는 장애는 무엇인가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평생교육과 문화창달의 대표적 장치라는 도서관의 발전은 거의 눈에 띄지 않는 것이 없다. 흔히 도서관계에서 도서관발전의 부진요인으로 경제제일주의적 사회현상과 정책의 부재현상을 들고 있는 것 외에 기인한다.

과거 40여년 동안 도서관계가 발전을 위한 몸짓을 보이면서 주장해온 것도 위에서 지적한 사회적·정책적 현상을 탈피하기 위한 모색일 것이다.

1963년 도서관법이 제정된 이후 무려 24년이라는 세월을 거쳐 1987년 법개정이 이루어지기까지도 많은 논의가 있어왔고 최근에도 그러한 현상은 한층 심화된 인상을 주고 있다.

1986년 도서관계는 도서관발전방안을 수립, 정부·여당에 건의한 바 있는데 당시의 건의내용의 핵심사항은 다음과 같다.

▲정책담당부서의 설치 ▲도서관법의 개정 ▲국립중앙도서관 기능의 강화, 이 세가지 요구의 결과로 도서관법 개정은 당시 여당의



이경구씨

중요사업으로 채택된 바 있는데, 그 주요내용은 ① 도서관법 개정 ② 도서관 행정전담부서의 설치 ③ 전문직에 의한 도서관 운영 ④ 도서관시설의 확충 ⑤ 도서관 장서의 확충 ⑥ 운영의 내실화 ⑦ 도서관 상호협력체제의 구축 ⑧ 재정지원의 확대 등이었다.

하지만 법개정을 제외하고는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그런 점에서 우리나라 도서관정책은 Unisist가 제시하고 있는 계획요소인 ① 정보정책기구 설치 ② 정보처리기관의 협력망 구축 ③ 컴퓨터법에 의한 데이터베이스 편성 ④ 표준화 등과 NATIS가 제시하는 계획요소인 ① 공식적 정책기구설치 ② 협력망 조직 ③ 납본제도의 확립 ④ 정보기관의 육성 등과 같은 맥락에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도서관에 대한 국가정책이 결국 탄탄한 제도적 장치의 바탕위에 성립된다는 점이 명백한 사실이고 보면, 우리나라에서도 어떤 정책기구가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임에 틀림없다.

세계각국의 도서관정책 및 정책기구

그런 의미에서 몇나라의 도서관정책기구에 대해 간략히 소개하면, 미국의 도서관정책은 1948년 공공도서관봉사를 위한 국가계획이 수립됨으로써 발전의 기틀을 마련했고, 1964년 '도서관봉사 및 건축법' 제정으로 현재의 모습과 같은 급속한 발전을 이룩했다. 또한 대통령직속기관인 '도서관 및 정보과학국가위원회'가 정책담당부서의 역할을 맡아 실질적인 조직의 편성과 운영방법, 예산한도액, 단위사업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정책문제를 다루고

우리의 경우 평생교육과 문화창달의

대표적 장치인 도서관의 발전을

뒷받침해줄 만한 실질적인 도서관정책은

거의 전무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도서관에 대한 국가정책이란

탄탄한 제도적 뒷받침으로 비로소

그 유효성을 발휘한다는 점에서

도서관발전을 위한 정책기구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다.

있다.

영국 또한 1964년 제정된 '공공도서관·박물관법'을 국가시책화 하였는데, 이 법은 도서관 정책기구의 설치를 강제 규정하고 세제를 확립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받고 있다. '교육과학부'가 도서관정책의 책임을 전담하고 있으며, 자문위원들이 파견되어 공무원과 자문위원의 결합형식을 취하고 있는 특색을 띤다.

1981년 이후 사서직이 대학교수·회계사·경제간부·편집자와 함께 5개 전문직종으로 분류되고 있는 중국은, 1945년에 391개에 불과하던 도서관이 1980년에 30만개를 넘고 있어 적극적인 정책적 고려의 중요성을 시사해 주고 있다.

이들의 경우를 본받아 우리 역시 도서관 육성에 국가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사서의 입장은 업무상의 문제나 경영에의 참여 등에 있어 다른 조직과 달리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고 이용자를 위한 것이다. 따라서 봉사를 제1의 철학으로 생각해야 하는 도서관 업무의 성격상 사서의 입장은 대민봉사에 따른 스트레스가 그 어느 직종보다 강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서에 주어지는 반대급부는 여타의 다른 직종에 비해서 보잘 것이 없다.

사서가 누릴 수 있는 몇가지 반대급부를 환경적 요소와 더불어 정책적 차원에서 얘기해보자면 첫째는 전문직에 의한 도서관 운영이고, 둘째는 근무환경의 개선인데, 이는 인사문제와 근무부담, 그리고 보수의 세가지 측면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셋째는 사서직원의 자질 향상으로 도서관 현장에 알맞은 인력으로 키우기 위한 교육과정상의 획기적 변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사서자격증 취득을 위한 국가

고시제 문제도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는 이용자에게 대한 적극적인 봉사활동이다. 참신한 자료수집을 위한 과감한 예산지원, 각종 사회교육과 문화활동을 지원할 행정기관끼리의 긴밀한 유대만이 지금까지의 우리 도서관이 보여준 폐쇄성 등을 개선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사서들의 적극적인 사고의 변화 역시 필요하며, 개가제·대출제의 시행은 말할 것도 없이 시행되어야 한다.

다섯째는 지역내 각종 도서관끼리의 협력으로, 국립중앙도서관은 1989년초에 각시·도의 공공도서관 가운데 하나를 지역대표관으로 지정해 놓고 있으나, 그 성과는 미미하다. 공공도서관이 지역내 도서관을 지원하는 시스템 개발과 전산화된 정보유통의 전국적 네트워크 구축되어야 도서관간·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그런 점에서 지역대표관 운영도 정보의 흐름과 행정의 흐름이라는 두가지 측면에서 재검토되어야 마땅하다.

도서관정책과 사회복지의 증진

도서관은 인간의 정신세계를 풍요롭게 하는 사회적 장치이다. 때문에 우리나라의 정책당국은 도서관정책이 민생문제와는 직결되지 않는다는 식의 사고를 버리지 못한 것 같다. 그러나 1990년대에 접어들어 국가정책을 사회복지증진에 치중한다고 표명한 이상 도서관정책도 이제는 뒷전으로 돌릴 명분이 없다. 이런 점에서 강력한 정책담당부서의 구성, 도서관 현장의 체질개선, 우수한 전문인력의 양성, 지역주민의 알 권리를 지켜주는 정책적 배려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믿는다. 이에 따른 사서 스스로의 자세도 현실보다는 미래지향적 태도로, 소극적인 안주보다는 적극적 참여의 모습으로 탈바꿈하여야 할 것이다.